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담당자	김혜진 팀장(02-398-7729)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02-398-7740)
		일 시	2026년 10월 22일(목)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9호 발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서비스 격차 완화를 넘어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보육의 질과 형평성 보장으로 나아가야"

〈 주 요 내 용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된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9호를 기획·발간하였다.
- 이번 호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적 격차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주요 성과와 교육·보육 현장의 인식 및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향, 유아교육·보육 재정체계의 현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배분을 위한 정책 과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성과와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다루었다.
- ✓ 권두언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어떤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 집중조명
 -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유아교육·보육 재정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서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으로 /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정책동향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 김지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주요 원고 요약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어떤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황옥경(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은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영유아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육·보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해소해야 할 격차를 영유아와 부모가 직접 경험하는 '경험의 격차'와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구조적 격차'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 전문성, 근무조건 등 인력체계의 차이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교육·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 행·재정체계의 분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정책적 지향을 '서비스의 동일성'에서 '영유아가 경험하는 질의 형평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3년부터 추진된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과 같이 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인 반면, 유보통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사 지원체계 개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구조적 과제는 더욱 집중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계뿐 아니라 교육·보육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아교육·보육 재정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동훈(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보육사무의 교육부 이관으로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는 일원화되었으나, 유보통합 관련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추진되는 등 유아교육·보육 재정의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유보통합 재정 논의에서는 재원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확보된 재원이 영유아교육·보육 부문에 안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원아 수 변동에 취약한 바우처 중심 지원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유아교육·보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 총량 확대와 함께 교부금 배분 단계에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장애·다문화 영유아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교사 처우 개선 등을 병행함으로써 유보통합의 목표인 ‘동등한 질의 교육·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서 국가책임형 영유
아교육정책으로

김대옥(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영유아교육·보육정책은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0~5세 영유아교육·보육을 포괄하는 재정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제도적 통합을 넘어 영유아와 보호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지방 행·재정체계 일원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중장기 계획과 비용 산정체계의 통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영유아교육을 국가교육체계의 출발 단계로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육아정책포럼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육아정책포럼 제89호 파일 1부.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상세문의] 출판홍보팀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출판홍보팀

김혜진 팀장

주송희 책임행정원

02-398-7729

02-398-7740